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식 및 유권자 권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수행과제명 :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Tel : 02-3156-7101, e-mail : kwh56@kwidimail.re.kr

요 약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어야 함. 이를 위해 여성정치인 뿐만 아니라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 확대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함. 이에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여성정치세력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축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여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정치인 뿐만 아니라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주요 투표 행위자로서의 여성유권자가 선호할 공약이나 정책 마련 등에 있어서 세세하고

전문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여성정치세력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축적을 위해, 각종 공직선거시 성별통계분리 산출 의무화 및 남녀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예산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는 물론이지만 크게 보아 생활정치실현 및 사회정의구현에 여성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주체는 크게 두 영역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이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주체 1 : 정부

▶ 각종 공직선거시 남녀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지원

-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 조사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 이러한 조사연구의 부재는 여성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문제점과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치의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 따라서 앞으로의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여성유권자 표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 연구, 기존 정치 풍토에 여성정치문화의 영향력 발휘를 위한 방안, 여성에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의원들의 여성인식 조사, 여성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거제도 관련법제 연구, 경선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등의 연구 지원.

- 연구의 지속적인 연계성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성별 통계 분리 산출 의무화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결과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성별 통계는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간 성차 및 성별 분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거결과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의 산출 의무화가 요구된다.
- 투표율, 직업 분류 등에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이 요구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성인지 능력 향상교육 강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인 대상 혹은 정당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에 성인지 능력 향상교육을 일정과목 편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유권자 권리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유권자의 권리, 후보자 선택, 입후보자의 소양 교육 등) 사업 추진시 여성가족부는 공동협력사업 형식 등을 통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단,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

□ 주체 2 : 정당

▶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의무제화

- 국회 및 지방선거의 지역구 30% 의무공천제로 바꾸어 여성공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정의실현 및 생활정치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 금번 조사결과, 유권자들은 여성당선자의 증가가 ‘사회 각 분야 여성참여 증대(32.9%)’, ‘생활정치 활성화(23.8%)’, ‘부정부패 축소(22.4%)’ 등의 사회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공천 의무제화

- 유권자 의식 조사결과는 여성 후보 지지에 성별 요인보다 정당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여성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여성이 출마한 기초의회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결과,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했다(20.1%) <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31.0%)
 - 금번 과제에서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남녀 유권자의 여성구청장 후보 선택요인 조사 분석 결과, 여성구청장 당선지역의 경우 ‘여성 후보(인물)이기 때문에’ 지지했다(25.7%) <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44.7%)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무엇보다 정당의 지지도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의 전략공천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공천 의무화를 제도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제화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여성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으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 주요 정당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은 곧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진다. 주요 당직에의 참여는 여성들의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며, 이는 공직선거시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게끔 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 따라서 정당들은 특히 중앙당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과 “여성정치인 발굴”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정당들은 당차원에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정치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 풀을 확장해야 한다.

▶ 우수 평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자치단체장 재공천 보장

-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의원원의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향후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 및 확충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여성의원원에 대하여 재공천을 담보해주고, 당 우세지역에 일정 비율을 전략 공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의원 경력지속 및 향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효과

-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 확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 생산
 - 정부의 각종 공직선거시 남녀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지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공직선거 통계 산출시 성별통계 분리 산출은 정부, 정당, 여성단체가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확보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구결과와 기초자료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사회정의 구현
 - 여성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당의 모든 노력들은 여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 및 세력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좀 더 생활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를 대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국회, 정당 등
▶ 관계부처 : 선거관리위원회
